

경기도 김동연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재평가 활동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설문조사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설문조사
1.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조사
2. 10대 이상 30대 미만 청년
3.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4.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결정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결정

[청년기회소득+] 변화한 시대상 맞춰 '더 고른' 가치 찾는 청년기본소득

도민 40% "청년기본소득 폐지 또는 가점제" [경기=이리원 기자] 반면, '보육비 제공'과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는 응답이 고를 받는 것을 '기본소득'과 비교해 '고른' '선별'을 선택했다.

이리원 기자 | yir@yeonggi.co.kr | 등록 2024.03.28 09:00 | 1면

▲ 지난 2월 '청년기회소득' 발표를 앞둔 시점에 '청년기회소득'을 도입할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경기=이리원 기자)

우리가 여럿이서 모여 사는 사회상을 반영한 청년기본소득이 '유체자본'의 많은 한계로 그칠 뿐 실제 정책적 효능을 나타내지 못하면 가변 요구가 나오고 있다.

보도 자료

보도일시	2024.9.24(수) 배포	작성	사간	o	자료	x	팩트	주
발행부서	청년기회소득팀 (청년정책팀)	과장	이리원 (031-8008-3360)	팀장	윤정호 (031-8008-3470)	발행자	유승환 (031-8008-343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발원 방안 모색 주제로 정책 토론회 열어

○ 9월 21일 팔당구 옛 경기도청사내 경기도 청년미래기구 411 강당에서 개최
- 4기 청년미래: 대안 청년기본소득 발원방안 정책토론회 진행
-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연령, 조건, 사용처 등 청년의 의견 청취 및 숙련된 정책 마련

경기도가 지난 21일 청년의 삶을 열어 팔당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 청년미래기구 411 강당을 개최하고 청년기본소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청년미래기구는 청년들의 다양한 기도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청년발원위원회, 도는 올해 4월 모친인 4기 청년위원회 250여 명을 발원제에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수 경기도위원회'와 '최대치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인영 경기도 청년미래위원장, 참석한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브라운홀을 마련, 청년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당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대표 정책이다.

토론회에서 다른 주요 내용은 ▲발원 수단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안 ▲이달 대상물, 청년 1인(19~30세) 확대하는 방안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고, 사용처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 정책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자료화면 1